

현안과제연구

# Issue Report

2016. 03. 31

## CONTENTS

< 요약 >

1. 연구개요
2. 공유경제 이론적 논의
3. 충청남도 공유경제 현황 및 과제
4.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공유경제 현황 및 활성화 전략

이홍택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임연구원, [lht@cni.re.kr](mailto:lht@cni.re.kr)  
전지훈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basillica@cni.re.kr](mailto:basillica@cni.re.kr)  
박준섭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jacobp73@cni.re.kr](mailto:jacobp73@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충남형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요 약

- 현재 충청남도의 공유경제는 농기계 및 일부 공간 공유에 국한되어 있으며, 교통, 유희농지, 유희공간, 지식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안 과제가 존재함
  - 첫째, 충남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공유자산과 공유경제 주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 필요
  - 둘째, 충남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전략적 타겟팅 필요
  - 셋째, 공유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민간 공유경제 주체의 형성과 더불어 이들의 역량강화 필요
  - 넷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물적 인프라 구축 필요
- 상기의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음.
  - 첫째, 충남형 공유경제 육성을 위해 공유자산 및 주체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유경제 중점 육성 분야와 지원체계가 담긴 공유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 둘째, 다양한 공유경제기업 또는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공유경제기업(단체) 인증제 및 지원체계 구축
  - 셋째, 도민들이 다양한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넷째, 공유경제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섯째, 공유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중간지원체계 구축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유경제는 유희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공유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IT,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이 주요 요인이며, 특히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는 성장을 위한 신규 투자보다 기존 자원의 활용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가속화시킴
-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350조원(PwC, 2013)으로 성장할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희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홈셰어링, 카셰어링 확산을 위한 주차료 감면,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음
  - 영국 또한 공유경제를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산업정책, 고용정책, 지역발전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 공유경제를 적용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유경제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전 등)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공유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 공유허브 구축, 공유경제 중간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외에도 약 30여개의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그러나, 충청남도의 경우 아직까지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유경제 자원 및 주체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히, 도 차원의 공유경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이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공유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 분석과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충청남도 공유경제의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
  - ①공유경제 이론적 논의
  - ②충청남도 공유경제 현황 및 과제
  - ③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①공유경제 이론적 논의
  - 공유경제의 개념, 등장배경,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공유경제의 유형과 운영 메커니즘을 중점 분석하고자 함
  - 또한, 향후 충남에서 공유경제를 도입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특징과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함
- ②충청남도 공유경제 현황 및 과제
  - 공유경제 도입이 필요한 논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유경제의 시장규모 및 각국의 정책적 동향을 우선 정리하고자 함
  - 또한, 현재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실태와 공유가능 자산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충남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를 검토
- ③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 1. 공유경제 개념 및 등장배경

### 1) 공유경제의 개념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개념은 Lessig(2008)의 저서<sup>1)</sup>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공유경제를 ‘가격이 아닌 다양한 사회관계에 의해서 조율되는 경제’라고 정의
  - Lessig은 공유경제를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유경제를 사회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화
-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경제를 정의하는데 있어 학자 및 정책입안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기존 자원을 협력적 관계 속에서 교환하는 새로운 경제활동 방식으로 인식
  - 국토연구원(2015)은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의 개념이며,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서로 이익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
  - 김형균 외(2013)는 공유경제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대여 또는 교환하여 상호편익과 적정이윤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생활 방식으로 정의
  - 서울시(2012)는 자원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유를 하도록 개방하여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1)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표 1> 주체별 공유경제 개념

구분	개념
국토연구원 (2015)	•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의 개념이며,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서로 이익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활동
김형균 외 (2013)	•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지식을 소유하기보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대여 또는 교환하여 상호편익과 적정이윤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생활방식
권애라 (2013)	•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방식으로, 협력적 소비의 등장에 따라 공유경제가 새롭게 조명
서울특별시 (2012)	•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기보다 해당 자원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유를 하도록 개방하여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경제활동

-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란 물건이나 지식, 공간, 경험 등 개인이 가진 여분의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의

## 2) 공유경제의 등장배경

- 공유경제의 성장은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가 야기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3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의 발달에서 기인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저성장, 취업난과 실업, 가계소득 저하 등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 방식의 일환으로 공유경제가 부각
  - 그동안 많은 자원거래가 풍요로 정의되었고, 과잉 소비문화를 만들어 냈던 소유경제가 장기간 경제침체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소비 수준은 유지하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의 욕구가 증대됨(권애라, 2013)
- 특히, 3차 산업혁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의 발달은 다양한 공유경제(기반) 활동의 기반으로 작용
  - 사물인터넷은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에 걸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모든 영역에서 한계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떨어트림(리프킨, 2014)

- 또한, 사물인터넷은 실시간 정보수집을 통해 거래비용을 제로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개인간 거래실적 및 타인에 대한 평판 조회 등을 가능하게 함
- 특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은 개인 정보력의 향상과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고, 개인들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양한 방식의 사업과 활동 전개가 가능

#### <미래학자 리프킨이 제시한 공유경제의 미래 >

- “극도의 생산성이 주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빠르게 재화와 서비스가 거의 무료 수준인 시대로 이동하고 그와 더불어 자본주의는 다음 반세기에 걸쳐 쇠퇴하며 협력적 공유사회가 경제생활을 조직하는 지배적인 모델로 자리 잡는다”

자료: 리프킨, 한계비용제로 사회

### 3) 공유경제의 이론과 사회적경제

#### ● 공유경제의 이론을 구성하는 4가지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구성원들간에 연대와 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시장자본주의의 대안 경제시스템
-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사물의 완전한 개인 소유보다 타인과 협력하여 공유와 기여를 통한 소비활동을 추구(Botsman & Rogers, 2010)
-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ectual): 사용자 중심으로 내용이 작성되는 인터넷 백과사전 Wikipedia처럼 다수의 주체들이 지식창출의 협력과 경쟁 과정을 통해 집단의 지적능력을 향상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Bourdieu(1986)가 자본의 한 종류로 사회적 자본을 개념화한 이후 Coleman, Putnam 등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구성원들간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형태의 자본

#### ●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관성

- 공유경제는 재화의 공유재적 시각을 기반으로 시장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유기반사회」 기반위에 실현(Walljasper, 2010)

-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실패의 극복과 사회적배재의 처방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주체간 경쟁보다는 협력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의 공유가치 패러다임(전지훈·강현철, 2015)
-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제품과 자본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에 방점을 둠(Botsman & Rogers, 2010)
- 구체적으로 두 개념들은 사적소유와 탈사회적 경제활동의 시장자본주의적 한계의 가정들을 극복하고 사회적 목적, 호혜성, 협력의 생산방식, 공동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일치된 내재적 특성을 지님

## 2. 공유경제의 유형 및 작동 방식

### 1) 공유경제의 유형 분류

- 공유경제는 개인, 집단, 대중간의 유희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근간이며, 공유가 능한 유희자원은 공간(장소), 물건, 지식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음
- 공유경제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이용자원과 제공 서 비스에 따라 대별해 볼 수 있음
- ‘이용자원’에 따른 유형 분류는 ‘유형자원’, ‘무형자원’으로 대별되며 유형자원은 비 소모자원, 소모자원으로 세분이 가능(권애라, 2013)
  - 유형자원 중 비소모 자원은 일반적인 재화나 부동산 등과 같이 이용을 통 해 소모되지 않는 자원으로 대부분의 공유자원이 해당
  - 유형자원 중 소모 자원은 식료품과 같이 거래를 통해 상품이 소모되나, 가 치의 공유를 위한 소비라는 특징이 존재
  - 무형 자원은 경험, 시간, 지식, 노동력 등 물리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추상 적인 자원으로, SNS 등의 발달로 인해 활성화 되고 있는 영역

<표 2> 이용자원에 따른 유형 분류

구분	유형자원		무형자원
	비소모 자원	소모 자원	
형태	• 소모 안되는 자원	• 소모되는 자원	• 정보 및 서비스
특징	• 상시적 이용 목적	• 이용으로 가치창출	• 관계를 통한 가치창출
사례	• 공간, 교통, 물품 등	• 소셜 다이닝 등	• 지식, 경험, 시간 등

자료: 황영모, 2015, 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공유경제 운영 시스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면, 공유경제 자원을 제품 서비스 시스템, 재분배시장, 협력적 생활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제품서비스시스템: 기 생산된 제품을 소유가 아닌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셰어링 등의 유형이 해당
- 재분배시장: 사물의 활용가치가 감소하거나 재활용 상품들에 대해 공유하는 시장으로 중고가전, 벼룩시장 등의 시스템을 의미
- 협력적 생활양식: 사물 거래방식에서 나아가 사람들간 관심사, 이슈, 지식, 흥미 등 무형자산 공유를 위해 유형자산의 교환을 의미하며 크라우드펀딩, 지식공유, 소셜금융 등이 해당

<표 3> 이용자원에 따른 유형 분류

제공서비스	거래방식	공유자원	공유기업	
			국외	국내
제품서비스	사용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자동차 셰어링	-Zipcar, Streetcar, GoGet	-쏘카, 그린카
		-바이크 셰어링	-Velib, Barclays, Cycle Hire	-푸른바이크 셰어링
		-태양에너지 공급	-SolarCity, Solar Century	
		-장난감 대여	-DimDom, BabyPlays	-희망장난감도서관
		-도서 대여	-Chegg, Zookal	-국민도서관, 책꽃이
		-농기계(구) 대여	-farm link	-농기계 임대사업소
재분배시장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경매시장	-ebay, craigslist, flippid	-옥션, 지마켓, 11번가
		-물물교환 시장	-Threadup, Swapstyle	-키플, 열린옷장
		-무료/상품권 교환	-Freecycle, Giftflow	
협력적 생활양식	커뮤니티 내 사용자간의 협력을 통한 방식	-공간공유	-AirBnB, Roomorama	-코자자, 모두의주차장
		-구인구직	-Loosecubes, Desksnearme	-알바몬, 알바천국
		-여행경험	-AirBnB	-플레이플레이닛
		-지식공유	-TeachStreet, TradeSchool	-위즈돔
		-택시 셰어링	-Taxi2, TaxiDeck TaxiStop	
		-크라우드펀딩	-Kickstarter, Indiegogo	-씨앗펀딩, 굿펀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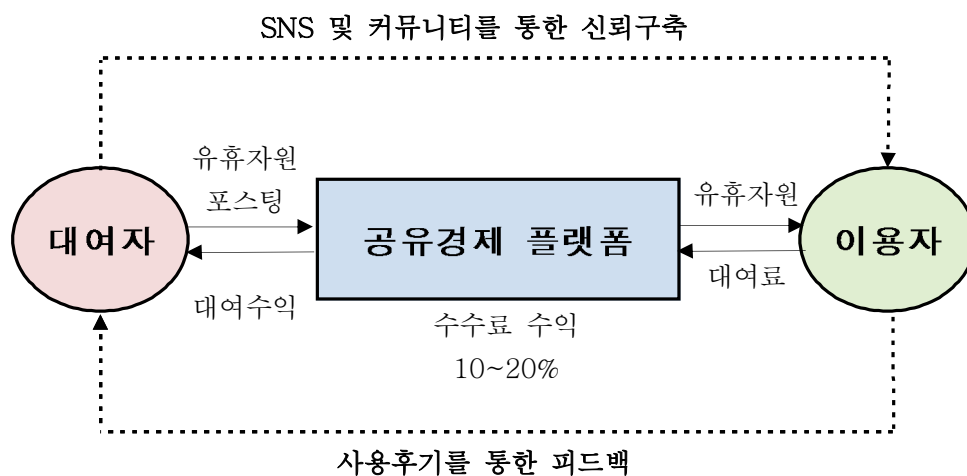
자료: 김점산 외, 2014,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경기개발연구원



## 2) 공유경제의 작동 방식

● 공유경제는 상품 및 서비스를 대여, 이용하는 주체를 양 측으로 하여 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 작동하는 구조임

- 대여자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유희자원을 포스팅하며, 유희자원이 이용되면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대여이익을 수령
- 이용자는 관련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유희자원을 이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이용료를 공급주체에게 납부하는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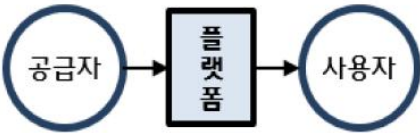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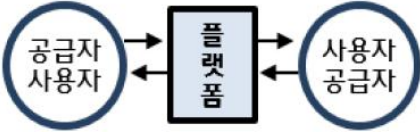




<그림 1> 공유경제 작동 메커니즘

자료 : 클라우드산업연구소(2013)

● 이러한 공유경제 메커니즘은 대여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세분화 할 수 있음

- ①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 : 유희 상품에 대한 P2P 중개 플랫폼으로 거래
- ② 쌍방간 사용권을 교환하는 방식 : 유희 상품 및 중고품, 재능 등을 커뮤니티 안에서 교환하는 방식
- ③ 소유권을 교환하는 방식 : 중고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방식
- ④ 사용권을 제공하는 방식 : 공급자가 사용될 상품을 제공하지만 이용자는 이용 권리를 회원가입 등을 통해 획득하는 방식

개인 대 개인 거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희상품에 대한 P2P 중개 플랫폼</li> <li>• 판매, 중고물품 재판매, 물물교환, 무료대여, 기부, 유료회원가입 등</li> </ul>
쌍방간 사용권 교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희물품, 중고물품, 재능/서비스 등을 커뮤니티 안에서 교환</li> <li>• 유료대여, 유료회원가입, 공동소유, 공동 운영, 무료대여 등</li> </ul>
소유권 교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물품 거래장터 플랫폼</li> <li>• 판매, 중고물품 재판매, 공동소유, 공동 운영, 기부 등</li> </ul>
사용권 제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렌터카 사업자와 유사</li> <li>• 유료회원가입 등</li> </ul>

<그림 2> 공유경제 거래 방식

자료 : 김형균, 2013, 도시재생 소프트 전략으로서 공유경제 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3. 공유경제의 특징과 쟁점

#### 1) 공유경제의 특징

- 공유경제는 전통적 방식의 소유경제와 대비했을 때 그 특성을 규정할 수 있음
- 전통적 소유경제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소유를 기반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사용자의 사용가치 극대화와 공급자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함(황영모, 2015)
  - 소유경제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는 주체 간 경쟁을 전제로 시장 원리를 통해 거래되는 데, 이 과정에서 전문기업으로 이루어진 중개자로 인해 공급자와 소비자간 단절이 발생

- 반면, 공유경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을 중심으로 한 <이용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급자와 이용자 등의 주체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적절한 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4> 소유경제와 공유경제의 특징 비교

구분	소유경제	공유경제
형태	• 소유	• 이용
목표	• 이윤 극대화	• 가치 극대화
목적	• 재화·용역의 소유권 이전	• 재화·용역의 이용권 이전
거래체계	• 시장 메커니즘	• 플랫폼 메커니즘
거래관계	• 주체간 경쟁	• 주체간 신뢰
거래구조	• B2C	• B2B
거래주체	• 공급자, 소비자	• 공급자, 소비자 연계
중개자	• 중개자=공급자, 전문기업	• 중개자≠공급자, 플랫폼
소비방식	• 개별적 소비	• 협력적 소비
신뢰확보	• 구매 경험에 따른 경로의존성	• 인터넷 평가
비용	• 고가	• 저가
자원사용	• 자원의 일방적 사용	• 자원의 순환적 이용
기간	• 장기, 사용횟수 적음	• 단기, 사용횟수 많음

자료: 김형균 외(2013), 한국디자인진흥원(2014), 황영모(2015)를 토대로 수정

- 공유경제의 수익모델은 이용자, 중개자(공유기업), 공급자 등 사회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순환될 수 있는 ‘윈윈(Win-Win)’구조임
  - 기존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통해 돈을 버는 수익활동과 사회기여의 영역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반면(예: 코카콜라의 북극곰 캠페인)
  - 공유기업은 기업의 수익이 사회적기여로 연결시켜, 대여자는 유희 자원의 수입원화, 이용자는 비용절약, 사회전체로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의 해소를 가져옴
-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난 몇몇 공유기업(AirBnB 등)의 혁신적 성공에 힘입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기업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최근 물품, 인력 등 유형 자원의 공유기업뿐만 아니라, 정장대여, 현지여행 가이드, 식사모임 등 정보 및 서비스 관련 분야까지 확대

## 2) 공유경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

-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약 요소로 작용
- 첫째,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부족
  - 우리사회 팽배해 있는 소유에 대한 욕망과 자본주의 시장이 가져온 제조와 소비의 미덕은 공유경제를 저소득층의 전유물 또는 불황기에 잠깐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 절하
- 둘째, 공유경제의 거래 및 신뢰 프로세스의 미흡
  - 공유경제는 개인간 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 및 품질보장의 우려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시스템 구축은 미흡
- 셋째, 기존 산업을 위협하여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에 더해 영업권, 소유권, 접근권, 이용권의 혼재로 인해 과세 등 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 존재
  - 공유경제는 작동 방식이 신규 투자를 통해 생산물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 및 전문서비스업 쇠퇴, 일자리 감소로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
  - 또한, 공유경제는 기존기업의 영업권(호텔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침해하고, 소유권, 접근권, 이용권의 혼재에 따른 법적 책무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우려가 존재

<표 5> 공유경제를 둘러싼 과제

시민의식	기업환경	경제환경	법·제도
-대중의 중고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통적인 가치와 반대되는 공유활동 -경제적 불황기를 맞은 일시적 득세일 수 있다는 시선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신분확인 어려움 -표준화된 리뷰 시스템의 필요성 -개인간 거래의 안전과 퀄리티 보장 부재 -동일 분야 서비스에 다수 스타트업 발생	-전통적 사업모델의 위협 -지나친 벤처투자에 따른 인위적 인플레이션 발생 -소비축소에 따른 일자리 및 경제축소 가능 -리소스 독점에 따른 양극화 심화 가능성 -전문서비스 업체의 수요를 축소	-일부 공유경제 모델의 위법성 -정부차원의 과세 지 난 -사회주의적 가치 또는 자유시장 자본주의 가치에서의 혼란 -소유권, 접근권, 이용권 혼재에 따른 법적책무 확인 혼란

자료: 김점산 외, 2014,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경기개발연구원

- 특히, 공유경제의 운영방식이 기존 법제도에 가져오는 혼란은 우버택시 논란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 우버택시는 스마트폰의 우버앱을 통해 유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모아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통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임
  - 우버택시는 한국 내 우버코리아를 설치하여 2013년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
  - 이후 2014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우버택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국토부는 우버택시의 법률 위반 단속을 지시
  - 이는, 개인차량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허가 없는 유상 운송업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법이라는 점이며,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도 주요한 요인
  - 특히, 우버택시가 네덜란드에 지주회사를 두고 있는 만큼 수익에 대한 과세문제와 개인 운전자의 보험 및 안전 이슈 등도 주요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우버택시 사례 >

-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택시 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를 타려는 사람과 태우려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20%의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임
- 2014년 12월 현재 현재 우버가 진출한 나라는 44개국, 170개 도시에 달함
- 그러나, 현재는 '불법 영업'이라는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소송이 발생하고 있음
  - 2014년 6월11일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영국 런던,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 독일의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택시들은 우버택시 규제를 위한 반대 시위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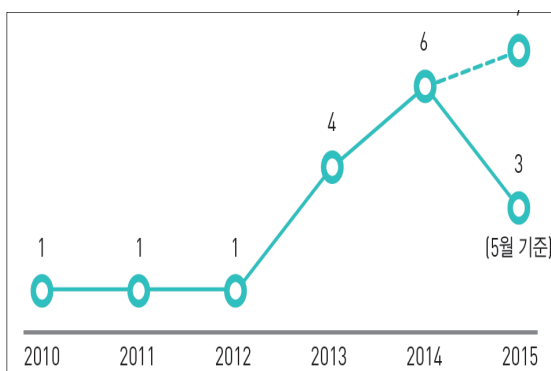
# 충청남도 공유경제 현황 및 과제 ◀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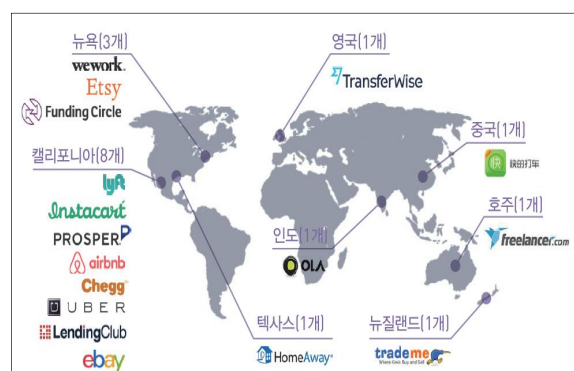
### 1.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

#### 1) 공유경제 시장 현황

-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약 3,350억 달러(약 35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영국 PwC, 2013)
  - 동기간 연평균 20%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며, 클라우드펀딩(63%), 온라인 직원중개(37%), P2P 숙박(31%), 카셰어링(23%), 음악/비디오스트리밍(17%) 순으로 성장세가 전망
- 특히, 2013년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보유한 공유 경제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 영국, 인도, 호주, 중국 등에 포진
  - 2012년 기준 기업가치 10억 달러를 돌파한 공유경제 업체는 1곳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 6개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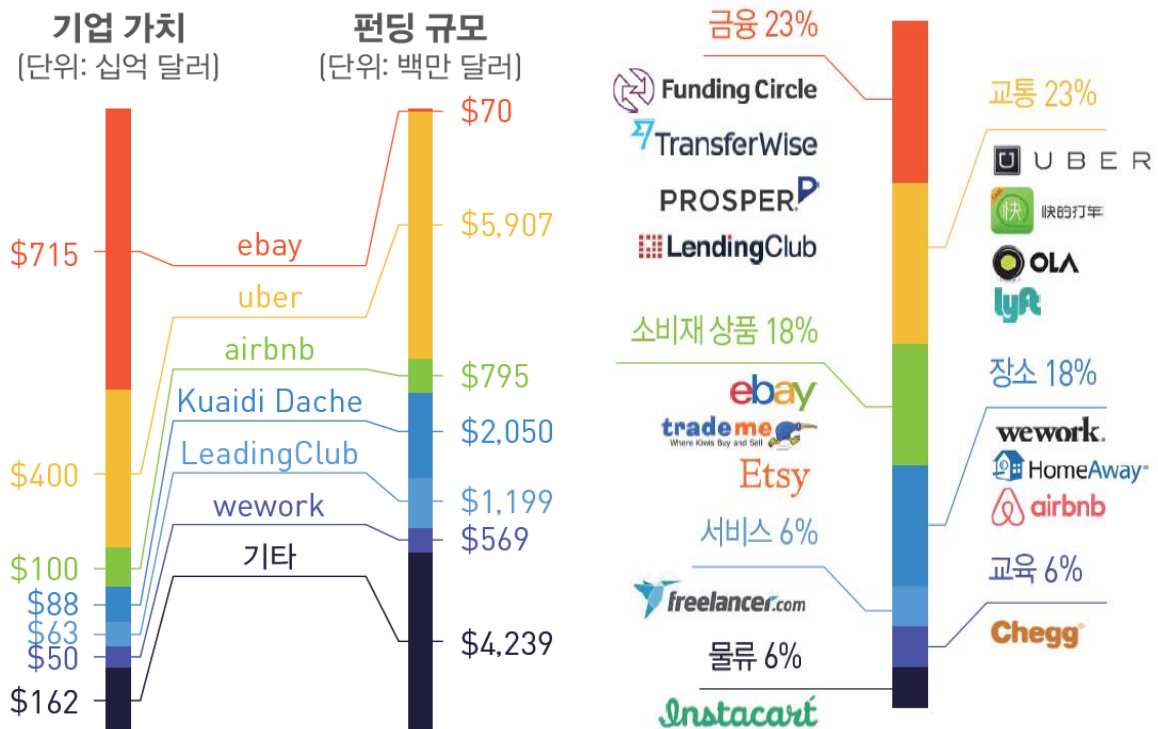


<연도별 기업가치 10억달러 공유업체 현황>  
자료: VentureBeat(2015.6)



<권역별 10억달러 이상 공유업체 보유 현황>

- 공유경제 기업가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을 보유한 업체 중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기업 가치의 90% 이상을 차지
  - 이베이(ebay)의 기업가치는 715억 달러로 주요 공유업체 중 가장 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주요 공유업체 중 가장 많은 펀딩을 확보한 업체는 59억 700만 달러를 조달한 우버(Uber)로 나타남
-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공유경제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금융, 교통, 소비재 상품 영역인 것으로 나타남
  - 동 기업 중 금융 및 교통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업체는 4개였으며, 소비재 상품 및 장소 공유분야에 각 3개가 존재



<기업가치 10억 이상 공유경제기업의 기업가치 현황>

<기업가치 10억 이상 공유경제기업의 활동분야>

자료: VentureBeat(2015.6)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도입단계라 할 수 있으며, 2011년부터 공유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 다양한 자원으로 확대 적용 중
  - 국내 공유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 공유허브(cckorea)에 등록된 주요 공유기업·단체는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인 80%를 차지하며, 다 수가 자본금 1억원 이하, 직원수 5명 내외의 스타트업 기업
- 우리나라에는 공유경제가 미국에 비해 늦게 도입되었지만,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인해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98%, 이동전화 보급률은 111%로 세계 최고 수준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의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 국내외 공유경제 정책 현황

### □ 미국의 공유경제 정책 현황

- 세계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추진되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은 유희토지, 주택, 교통, 일자리 창출 4개 분야로 구분될 수 있음(김은란 외, 2015)
  - 미국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희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홈셰어링과 주택협동조합과 연계한 주거복지 향상, 카셰어링 확산을 위한 주차료 감면,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정책 발굴을 추진 중
- 또한, 공유경제 확산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안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어 대응하고 있음
  -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카셰어링 보험 다양화 및 보험한도 확대, 카셰어링 운전자에 대한 신원조사 실시, 홈셰어링 주택에 대한 소유자 거주/상주 조건 제도 도입 등
- 다만, 연방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적 대응은 없지만, 각 지방 도시마다 공유경제 활동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표 6> 미국의 주요 분야 공유경제 지원정책 현황

분야	주요 정책	주요 사례
유희토지 공유	유희토지 인벤토리 제작	·샌프란시스코: 도시내 유희토지조사 실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필라델피아: 유희토지에 농산물 경작 시 등록세 감면
	도시농업 작물 판매허용	·오클랜드: 주거지역에서 재배된 작물 판매허용 규정 신설
주택 공유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단기임대 허용	·팜데저트: 주택지를 단기간 임대할 수 있는 허가권 발급
	공유개념을 반영하는 디자인 검토	·런던 그로브 타운십 : 조닝 조례에서 에코빌리지 디자인 개념 포함
	협동조합 공동주택 개발 지원	·뉴욕: 협동조합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Mitchel-Lama 프로그램 운영
교통 공유	카셰어링을 고려한 주차시설 제공	·워싱턴 DC: 카셰어링 운영자들에게 무상 노상주차 공간 제공
	공동주택 지역의 카셰어링 프로그램 운영	·샌프란시스코: 주차공간 지원
일자리창 출 공유	유희 상업공간 활용	·리치몬드: 빈건물에 벌금 부과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보조금 지급	·뉴욕: 이민자 지역에서 협동조합 발굴지원

자료: 김은란 외, 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 영국의 공유경제 정책 현황

- 영국의 경우, 공유경제를 보수당 정부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고 규제개혁, 정부부문 축소, 산업정책, 고용정책, 지역발전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 공유경제를 적용

- 영국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철폐하며 세제상 문제를 조정하는 등 민간 부문의 성장을 지원

- 특히 영국 정부는 도심활성화에 공유경제 모델을 적용하여, 신규 산업단지 건설이나 인프라 투자보다는 기존 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영국 이스트 런던의 테크시티의 성공 모델을 잉글랜드 북부도시에 도입하려는 TechNorth 사업은 산업정책, 지역정책, 고용정책 등 다양한 영역을 연계하여 공유경제 모델을 활용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정책 현황

- 중앙정부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각기 지원 정책을 추진
  - 기획재정부는 2015년 공유경제 현황 파악 및 KDI에 공유경제 관련 연구용역 발주 등 공유경제에 대한 기초 정보 수집 단계에 있으며,
  - 산업통상자원부 및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차 카셰어링, 공유기업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

<표 7> 중앙정부 부처별 공유경제 지원정책 현황

부처	정책 동향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합동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발표(2013) ·성장사다리펀드(2.5조원), 미래창조펀드(5천억원)
미래창조과학부	·무한상상실 전국 4개소 운영
국토교통부	·자동차 공유
문화체육관광부	·도시민박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요구에 실무적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카셰어링 시행

자료: 김은란 외, 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지자체의 경우, 2012년 서울시가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조례제정, 중간지원 체계 구축 등 국내 최초로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실시
  - 2013년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유정책 개발, 공유경제기업 인증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플랫폼인 ‘공유허브’를 구축하여 정보마당, 네트워크, 교육 등을 실시
- 또한, 최근 들어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은 공유경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현재, 30개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5개(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기초자치단체 25개(서울, 부산, 광주의 자치구, 경기 성남, 경남 거창) 등이 운영하고 있음

<표 8> 지자체별 공유경제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2012-12-31	사회혁신담당관
서울 강동구 외 20개 자치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 촉진 조례	2014-09-24	기획경제국 기획경영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2014-03-19	경제통상국 민생경제과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2014-12-30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	2013-11-01	참여혁신단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	2015-02-27	주민자치과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촉진 조례	2015-02-24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경기도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4-08-07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경기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2014-11-10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2015-02-17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정책과
경남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공유촉진 조례	2015-03-25	기획감사실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 2. 충청남도 공유경제 현황 및 과제

### 1) 충청남도 공유경제 현황

#### □ 충청남도 공유경제 실태 분석

- 현재 충청남도의 공유경제는 농기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14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
- 충남도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총 27개이며, 약 5,659개의 농기계를 보유
  -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이 각각 3개소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개소당 평균 농기계 수는 논산시 9개, 아산시 7개,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이 각각 6개로 높게 나타남

<표 9> 충청남도 시군별 임대사업소 현황(2015년 기준)

구 분	임대사업소 개소수			운영 인력	개소당 평균	농기계수 (대)	비고
	계	본소	지점				
합 계	27	14	13	137	5.1	5,659	
천안시	2	1	1	12	6	487	
공주시	2	1	1	12	6	447	
보령시	2	1	1	5	2.5	273	
아산시	1	1	0	7	7	513	
서산시	3	1	2	18	6	839	
논산시	1	1	0	9	9	243	
당진시	3	1	2	14	4.7	87	
금산군	1	1	0	6	6	516	
부여군	1	1	0	6	6	449	
서천군	1	1	0	5	5	201	
청양군	2	1	1	6	3	342	
홍성군	3	1	2	13	4.3	377	
예산군	2	1	1	7	3.5	513	
태안군	3	1	2	17	5.7	372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 농기계 공유현황을 살펴보면 총 39,038명의 농가가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아산시와 당진시의 이용자 수(각 5,400명)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논산시 300명, 천안시 1,129명, 서천군 1,572명으로 상대적으로 이용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 충청남도 시군별 농기계 공유 현황(2015년 기준)

구분	개소수	농기계 보유대수	임대일수(일)	이용농가수(명)	비고
합계	27	5,659	64,554	39,038	
천안시	2	487	4,751	1,129	
공주시	2	447	7,224	1,800	
보령시	2	273	2,050	1,740	
아산시	1	513	7,800	5,400	
서산시	3	839	5,424	4,600	
논산시	1	243	4,938	300	
당진시	3	87	7,850	5,400	
금산군	1	516	2,720	2,200	
부여군	1	449	3,314	2,040	
서천군	1	201	2,040	1,572	
청양군	2	342	4,852	3,560	
홍성군	3	377	2,905	2,272	
예산군	2	513	3,885	2,902	
태안군	3	372	4,801	4,123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유희 공간을 공유하는 자생적 공유경제 활동이 나타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공간 <사이>는 지역 내 유희공간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공유경제기업임
  - <사이>는 사회적기업 (주)즐거운밥상과 협동조합‘우리동네’조합원을 중심으로 만든 네트워크 공간임
  - 공간 사이는 지역의 유희 공간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한편, 시민 및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운영
  - 또한, 소셜벤처, NGO, NPO 등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창업 활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충남 공유경제기업 사례 : 공간 ‘사이’ >

- <사이>는 사회적기업 (주)즐거운밥상과 협동조합‘우리동네’가 함께 만든 네트워크 공간임
  - 해외에서는 ‘공유 공간(Co-working space)’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서울에 몇몇 공간만 있고, 지방에는 전무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임
- <사이>는 지역에서 공유경제를 견인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유 책꽂이 분양 등의 사업을 추진
  - 공유 책꽂이는 집에 있는 도서를 기증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소유의 책을 공간 <사이>에 옮겨 두고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활동임
  - 책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주 쓰지 않는 공구, 장비, 집에 남는 공간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을 고민하고 있음



<공간 사이 공유공간 현황>

- 그러나, 상기의 활동 이외에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유 활동은 미흡한 상황이며, 도 차원에서도 공유경제를 대비한 정책 방향은 부재한 실정
  - 현재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파악은 미비한 실정이며,
  - 도 차원에서도 충남의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육성 전략 수립도 미흡한 실정

### □ 충청남도 공유 가능자원 검토

- 충청남도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은 약 13개의 영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물건)공유가능 자산 : 자동차, 자전거, 농기계, 사무기기, 음식 등
  - (공간)공유가능 자산 : 유휴농지, 빈집, 빈방, 경로당 등

- (사람/정보)공유가능 자산 : 재능기부, 사회문제, 일거리, 정책 등

- 특히, 충청남도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공유경제 육성의 전략적 타겟팅은 교통인프라(자동차 등) 공유, 도시 밀집지역의 유희공간 활용, 농촌 지역의 유희농지 공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표 11> 충청남도 주요 공유가능 자원 유형

분야	공유가능 자원	내용
물건	교통(자동차 등) 공유	-개인차 카셰어링 -출퇴근 카풀 -유희자동차 공유
	자전거 공유	-주요 여행지 자전거 공유
	농기계 공유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사업 -개인 농기계 공유
	사무기기 공유	-시군 공공기관 사무기기 공유 -개인소유 사무기기 공유
	음식 공유	-과일, 반찬 등 음식 공유 -유희 음식물 가공 판매 후 수익 분배
공간	유희농지 공유	-유희농지를 원하는 도시민에게 임대 -농지주인은 임대료 수입 창출
	빈집 공유	-귀농자 및 마을사업자에게 임대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시도에서 지원
	빈방 공유	-빈방을 관광객에게 임대 -안전 문제를 위해 시군에서 관리
	경로당 공유	-주말시간대 경로당 공간을 임대
사람/정보	재능기부 공유	-재능기부자와 수요자를 연결
	사회문제 공유	-충남도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공유, 제안
	일거리 공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
	정책 공유	-도 및 시군의 정보공개

- 충청남도의 주요 공유자산인 빈집의 경우 도내 약 60,016개가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귀촌·농인 정착 지원 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미미

- 2010년 기준 충청남도 내에 60,016개의 빈집이 있으며, 이 중 파손없는 빈집은 50,547여개에 달함
- 이러한 빈집은 귀촌·귀농의 초기 정착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부족한 숙박 시설 또는 회의 시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함

- 그러나,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빈집을 공유 및 활용하는 사례는 미흡함

<표 12> 충청남도 빈집 현황(2010년 기준)

행정구역별	빈집	빈집사유-일시적(가끔)이용	파손정도-파손없음
충청남도	60,016	14,044	50,547
천안시	10,607	1,233	10,060
공주시	3,438	1,103	2,846
아산시	8,298	2,180	7,586
서산시	3,783	790	3,117
논산시	3,879	1,216	2,989
계룡시	1,426	32	1,423
금산군	2,258	837	1,631
부여군	2,344	699	1,582
서천군	3,232	801	2,429
청양군	1,281	490	950
홍성군	2,021	561	1,470
예산군	3,302	810	2,597
태안군	2,457	948	2,013
당진군	5,888	956	5,055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2010)

- 또한, 다목적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행복경로당은 180개(일반경로당 5,596개)로 미활용 시간에 관광객들의 숙소 또는 주민 및 단체 등의 회의장으로 활용이 가능

<표 13> 충청남도 지정 행복경로당 현황(2015년 기준)

시군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예정)
계	180	57	39	43	36	5
천안시	24	7	6	6	5	0
공주시	4	1	1	-	1	1
보령시	20	6	4	4	5	1
아산시	17	5	4	4	4	0
서산시	15	5	3	5	2	0
논산시	15	5	4	4	2	0
계룡시	2	0	-	1	1	0
당진시	3	3	0	0	0	0
금산군	12	3	2	3	3	1
부여군	12	5	2	3	2	0
서천군	13	5	3	3	2	0
청양군	10	4	2	2	2	0
홍성군	12	3	3	3	2	1
예산군	12	3	3	3	3	0
태안군	9	2	2	2	2	1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 2) 충청남도 공유경제를 둘러싼 주요 과제

### □ 충남 지역의 공유자산 및 공유경제 주체 등에 대한 실태파악 필요

-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충남도에는 공유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적, 인적 공유 자원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분석은 미흡한 상황
  - 경로당, 주차장, 체육관 등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이 가능하나, 민간 주체들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전무한 상황
- 또한, 도 및 시군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유 단체와 공유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유경제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
  - 충남의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의 발굴이 매우 중요

### □ 충남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전략적 타겟팅 필요

- 충남지역은 농촌과 도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곳인 만큼,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유경제 육성 전략이 모색되어야 함
- 도시지역은 높은 인구밀도를 기반으로 카셰어링, 유희공간, 정보 등 다양한 공유경제 육성이 가능한 만큼, 각 영역의 공유경제 주체를 발굴·육성하는 전략 모색이 필요
  - 천안시, 아산시 등과 같은 도시지역은 유희공간의 공유, 자동차 셰어링, 정보 공유, 사무기기 공유, 로컬푸드 공유 등 다양한 유형의 공유경제 주체 육성 필요
- 반면, 농촌지역은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만큼, 공유경제 육성 방향을 비교적 인구가 밀집한 <읍면소재지 중심의 활성화>와 <농촌지역 교통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충남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09~11년 간 -6.9%)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

- 이용자 감소 등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난은 벽지노선을 중심으로 버스운행의 감차·감회로 이어져 대중교통(버스)에 의존하는 지역주민의 이동권이 제약되는 악순환으로 작용
- 특히, 최근 농촌지역에서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이 방식에 공유경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이용 승객의 요구 및 수요에 따라 고정된 노선 없이 자유롭게 운행되는 유연화 된 대중교통체계임
  - 또한, 대형버스보다는 승합차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국내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 사례 >

- 영국 윌트셔(wiltshire) 주 트로우 브릿지의 위글리 버스(wiggly bus) 사례
  - 이 버스는 정해진 기점과 종점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며, 버스이용자는 사전에 전화 및 인터넷으로 예약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버스 이용이 가능
  - 1999년부터 운용하여 현재 4대의 미니버스를 이용해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음
- 호주 캔버라 Flexibus 사례
  - 2005년 4월부터 Canberra Action bus社에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로 야간에 운행되는 기존 버스의 공차운행에 대한 수지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함
  - 야간 20:30분 이후 고정노선을 운행하며, 환승 정류장 승차 후 집 근처에서 하차하는 방식과 집 근처에서 승차후 환승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됨

#### □ 공유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민간 공유경제 주체의 형성 및 역량강화 필요

- 현재, 충남 내에서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주체는 공간 공유에 국한하여 형성되어 있는 실정
- 충남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간 주체 발굴과 더불어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매우 중요함
- 또한, 도민들의 공유경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 유도 필요

□ 공유경제를 대비한 충남도 차원의 제도적·물적 인프라 구축 필요

●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방향 수립 필요

- 2014년 도 차원에서 공유 자원에 대한 기초 조사 및 도민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단발성의 사업에 그치고 말았으며,
- 특히, 향후 전 세계적인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은 매우 미흡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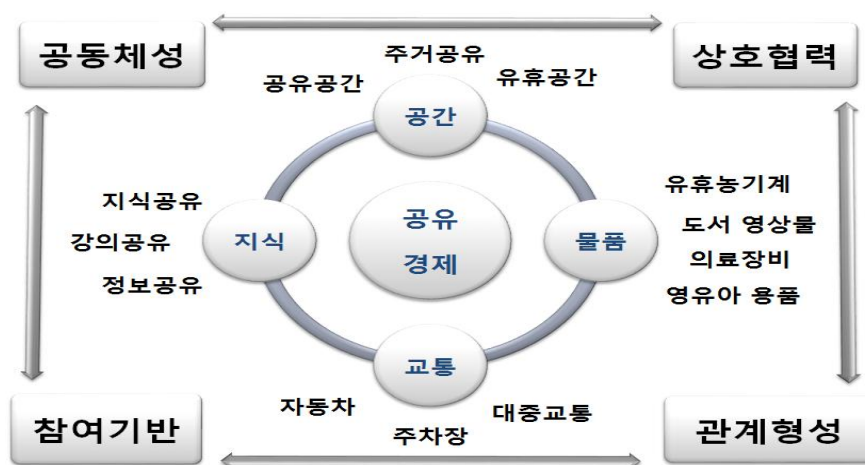
● 공유경제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 타 시도의 경우,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중간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현재 충남은 그 기반이 매우 미흡한 실정

## 1. 기본구상

### 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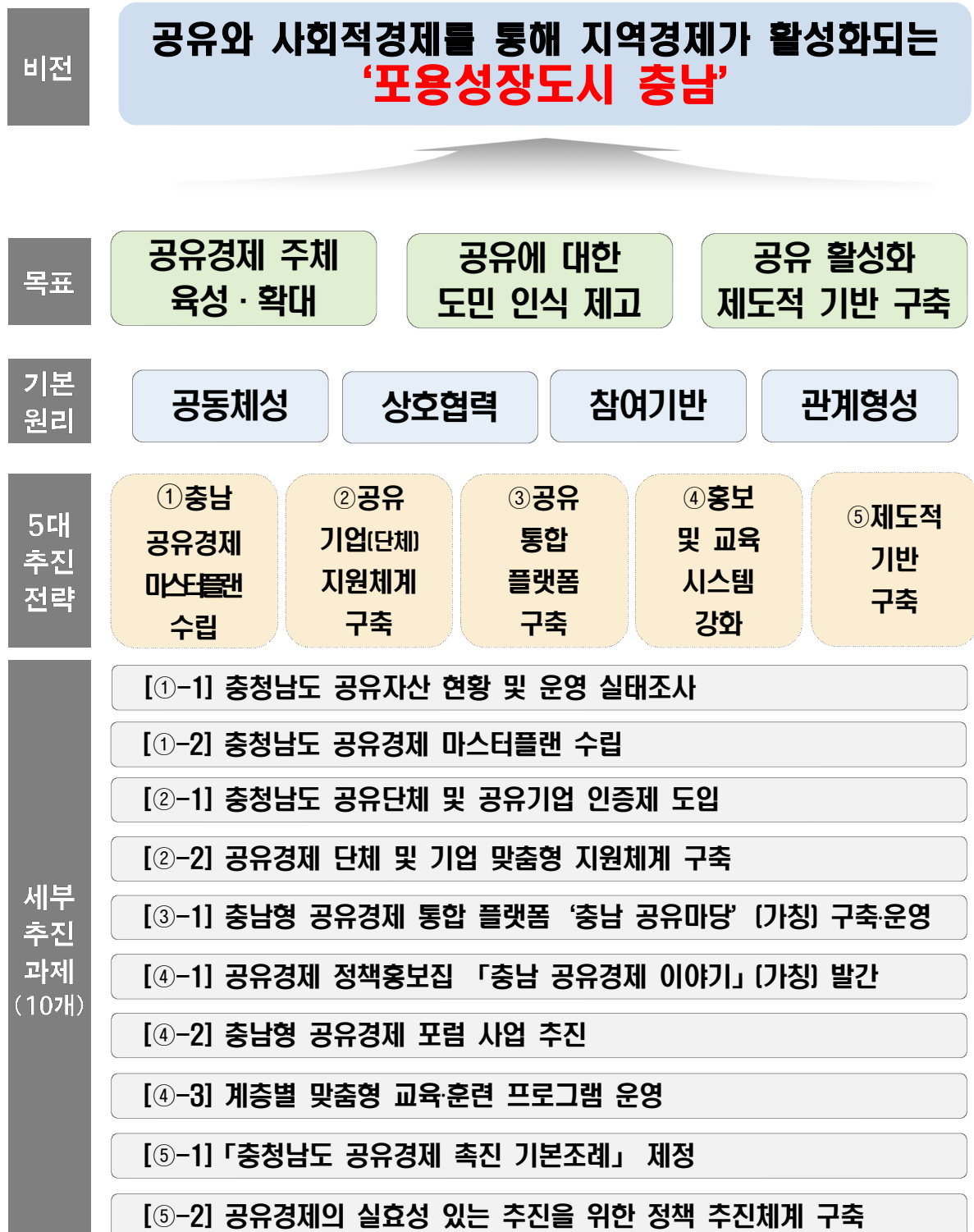
- 앞서 제시한 공유경제 운영 원리 및 작동 메커니즘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경제의 운영방식은 공동체성, 상호협력, 참여기반, 관계형성을 기본원리로 추진
  - 공유경제는 주체들간에 기본적으로 소유보다 공유를 위한 협력적 사고와 소비의 방식을 내재하여야 함
  - 공유경제는 자본이나 계층적 지위가 아니라 재화의 공동 활용과 소비를 위해 주체들 간의 평등성에 기초한 참여를 촉진해야 함
  - 공유경제는 파편화된 개인 가치의 소유보다는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체들을 기반으로 확립되는 경제구조임
  - 공유경제의 작동은 SNS 등 사회네트워크처럼 다양한 개방성에 기초한 주체들의 참여와 구성적 관계 속에서 형성됨



<그림 3> 공유경제의 운영원리와 영역

## 2) 충남 공유경제 비전 및 추진전략

- 사회적경제와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포용성장도시’ 충남을 향해 5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추진과제를 설정



## 2. 세부 추진과제

### 1) 충남 특화형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

#### □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현재 충남도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나, 공유경제 정책 도입 및 추진을 위한 실태파악과 추진 목표 설정은 미흡한 실정
- 특히, 충남형 공유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충남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유자산을 체계적으로 DB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자산을 토대로 공유경제 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
- 따라서, 충남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
  - 방향 1 : 충남도 유휴 공유자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방향 2 : 충남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유경제 중점 육성분야 설정
  - 방향 3 :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

#### □ 세부 추진방안

##### ● i)충청남도의 공유경제 자산 현황 및 운영 실태조사 실시

- 도 내에 산재해 있는 공유 자산 및 주체들을 식별하고, 해당 주체들의 운영 특성을 파악하는‘공유경제 실태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 구성체계 : 도민 공유경제 인식 현황, 시군별 공유자산 현황,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현황, 정책 수요 조사 등으로 구성

<표 14> 공유경제 실태조사 주요 지표

구분	주요 지표
①도민의 공유경제 인식체계	- 공유경제 인지, 자원소유 정도 - 공유경제 이용 및 기대 정도 - 공유경제 사용 및 제공 의향 등
②시군별 공유자산 현황	- 시군별/유형별 공유자산 현황 - 공유자산 이용 현황
③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현황	- 시군별 공유단체 활동 현황 - 시군별 공유기업 운영 현황
④정책 수요 조사	- 도민 대상 정책 수요 조사 - 공유경제 주체 관련 정책 수요조사

- 실태조사 추진체계 : 충남 경제정책과에서 주관하며, 충남도 내의 공유경제 관련 기관에서 실행하도록 함
-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공의 공유자산은 해당 시군 및 공기업의 적극 지원하도록 하며, 민간의 공유자산은 지역사회 내 중간지원기구가 적극 지원

● ii)충남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유경제 중점 육성분야 설정

- 도시형 공유경제 육성분야 타겟팅 : 천안시, 아산시 등 인구밀집 지역을 선정하여, 자동차, 사무기기, 빈방, 재능기부 등 다양한 영역의 주체를 육성하는 전략 마련

<표 15> 충청남도 주요 도시형 공유경제 육성분야(예시)

분야	내용
①자동차 공유	-개인차 카셰어링, 출퇴근 카풀, 유휴자동차 공유
②자전거 공유	-주요 여행지 자전거 공유
③사무기기 공유	-시군 공공기관 사무기기 공유, 개인소유 사무기기 공유
④빈방 공유	-빈방을 관광객에게 임대, 안전 문제를 위해 시군에서 관리
⑤재능기부 공유	-재능기부자와 수요자를 연결
⑥사회문제 공유	-충남도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공유, 제안
⑦일거리 공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

- 농촌형 공유경제 육성분야 타겟팅 : 비교적 인구가 밀집한 <읍면소재지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과 <농촌지역 교통체계 개선 전략>을 중심으로 타겟팅

<표 16> 충청남도 주요 도시형 공유경제 육성분야(예시)

분야	내용
①교통	-공유경제 기반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
②빈집	-귀농·귀촌인 대상 빈집 공유, 숙박업소로 리모델링 등
③유휴토지	-유휴토지 공유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활용

#### <공유경제 기반의 신규 교통 서비스 사례 >

- 아베고(Avego)
  - 운전자와 탑승자 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 카풀 매칭을 중개하는 서비스
  -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현재 가용한 운전자와 탑승자의 위치를 파악
  - 탑승자가 구매한 이용 포인트를 거리에 비례해 차감하며 해당 수익 중 일부를 카풀 제공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 Buzzcar
  -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이웃과 서로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차량 미이용 시간에 다른 주민들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일정한 금액을 받는 구조

#### ◎ iii) 충남 공유경제 마스터플랜(5개년) 수립 및 시행

- 충남의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진 마스터플랜을 수립
- 계획의 구성체계 : 계획은 충남도의 주요 여건진단,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기본 구상 및 추진전략 등 5대 요소로 구성함
- III. 기본 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에 있어 기본구상은 충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으로 설정(일례로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하며, 추진 전략은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육성 계획, 중간지원기구 설치·운영 계획,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 등을 포함

#### <계획의 구성체계>

- |                         |                    |
|-------------------------|--------------------|
| • I. 계획 수립 개요           | • II. 충남 공유경제 여건분석 |
| • III. 기본 구상 및 추진전략     | • IV. 단계별 추진 계획    |
| • V. 사업 추진 체계 및 자원조달 계획 |                    |

- 계획 수립 추진체계 : 충남 공유경제 육성계획은 전담 부서(경제정책과), 전문가, 공유경제 관련 주체, 시민(사회) 주체 등으로 이루어진 ‘공유경제 TF’를 구성하여 수립
- 현재 공유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구 또는 네트워크 조직이 부재할 경우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사례 >

-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통해 단기적 차원의 추진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후 2015년부터 공유서울 2기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우선 추진 사업은 물건, 공간, 인간, 시간, 정보로 유형화된 정책 분야를 설정하여 단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
- 전라북도는 2016년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를 수립하였으며, 정책 도입을 위한 기본 구상 및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구성
  - 이 연구에서는 도민이 갖는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정책적 추진 전략으로 공유경제 제도마련, 공유경제 추진체계 구축 등을 제시



## 2) 공유경제 기업(단체) 인증 및 지원체계 구축

### □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다양한 공유가능 자산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가 있으나, 이를 조직화·체계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체계는 미흡
- 다양한 공유경제기업 또는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증해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인증된 주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
- 따라서, 충남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
  - 방향 1 :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 도입을 위한 인증체계 구축
  - 방향 2 :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방향 3 : 공유경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 세부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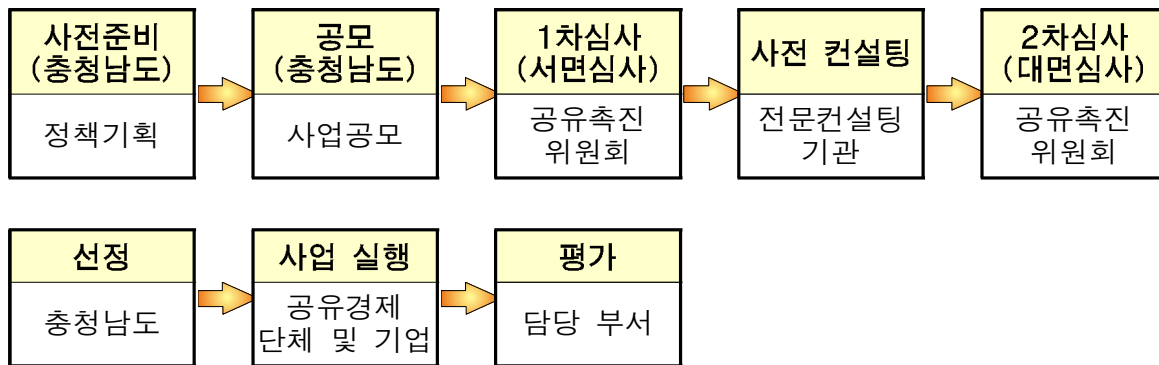
#### ● i) 충청남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인증제 도입

- 충청남도 내 공유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인증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를 발굴·육성함과 더불어 이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범위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범위(예시)>

-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경제 조직 등

- 주요 인센티브 : 인증된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해 인증마크(BI) 사용권을 부여하며,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 및 대외 홍보 지원
- 인증제 추진 절차 : 사전 준비→공모→1차 심사→사전 컨설팅→심의·선정→사업 실행→평가 및 환류로 진행



● ii)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 인증된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지원기구와 컨설팅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멘토링·컨설팅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공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재정 지원사업 운영 : 공유경제 인증 단체(기업) 중 우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추진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 재정 지원 사례>**

- 서울시는 공유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재정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하고 있음
- 지원규모는 사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10개 내외 사업을 지원(2013년 기준)
  - 사업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분야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 1차 공모에서는 ‘서울 공유허브’ 운영,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민간 유희공간 공유, 아동 의류 공유 등이 지정 대상으로 선정

- 기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연계 지원 : 역량이나 성과가 우수한 공유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용보증, 청년인턴 등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 우선 연계 지원

● iii) 공유경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공유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사회적경제 조직, 비영리 단체 등을 선정하여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사무공간 등 제반사항 지원
- 또한, 체계적인 창업 준비 지원을 위해 공유경제 창업 교육프로그램 지원

※ 기존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도 고려

###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 □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충청남도 공유경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다양한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매우 긴급요
- 또한, 초기 단계인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이 수월하게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도 많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한 상황
- 따라서, 충남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함
  - 방향 1 :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공유경제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온라인 시스템 구축
  - 방향 2 : 다양한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의 네트워크 형성

#### □ 세부 추진방안

- 충남형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충남 공유마당’(가칭) 구축운영
  -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흩어져 있는 공유 관련 정보와 공유 플랫폼에 관한 정보 축적
  - 충남 공유마당을 통해 공유경제 관련 주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 마련

####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사례>

- 서울시는 2013년 공유 플랫폼인 공유허브를 구축하였으며, 공유 가이드, 공유 기업/단체 정보, 주요 소식, 자료 아카이브 등으로 구성
- 부산시는 2014년 공유정보센터를 구축하였으며, 부산시 공유경제 사업 소개, 공유기업/단체 정보, 지역 공유자원 등으로 구성



<서울시 공유허브 플랫폼>



<부산시 공유경제정보센터>

#### 4)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① 우수 공유경제 정책의 발굴 및 홍보

###### □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공유경제 시스템이 충남도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수 정책사례들이 발굴되어 도민 전반에 공유확산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유경제 운영과정에서 부정적 효과나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사례와 그 긍정적 효과들이 충남 도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우수 공유경제 정책의 홍보와 공유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
  - 방향 1 : 충남도 공유경제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할 수 있는 우수사례집 발간
  - 방향 2 : 공유경제 관련 정책포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학습 기회 확대
  - 방향 3 : 선진 도시의 공유경제 정책 운영 사례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 □ 세부 추진방안

- i) 충남 공유경제 우수사례집 「충남 공유경제 이야기」 (가칭) 발간
  - 충남도 경제정책과를 중심으로 충남 공유경제 운영 현황 및 우수 공유경제 기업 소개 등이 담긴 사례집을 매년 발간
  - 특히, 공유경제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 정책 실무자가 공동으로 매년 공유경제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방향을 사례집의 주요 내용으로 제작
- ii) 충남 공유경제 도입·운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포럼 사업 추진
  - ‘충남 공유경제 정책포럼’ 설치 : 행정가, 학계 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정책포럼을 구성하고, 충남 공유경제의 운영 성과와 공유경제 정책 비전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
  - ‘공유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포럼’ 설치 : 충남도의 시민사회 주체들을 중심으로 충남도의 공유경제 정책을 발굴하고, 발굴된 정책들은 정책박람회 등을 통해 홍보 및 확산

- 이외 우리나라 공유경제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 부산시 등 타 사도의 공유경제 육성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 <공유경제 관련 포럼 운영 사례 >

- 서울시 공유상상 워크숍 : 공무원, 공유단체·기업, 공유촉진위원 등 다양한 민간 주체들을 중심으로 공유서울 추진을 위한 분야별 정책 설계 실시
- 전주시 공유경제 포럼 : 전주시는 일반 시민들이 공유경제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 8회에 걸친 공유경제 포럼을 개최
  - 포럼에는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그리고 공유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

## ② 공유경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

### □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현재 충청도에서는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공유경제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
- 향후 충청도의 공유경제 확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공유경제 정책 추진 시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실질적 접촉 주체인 하급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 공공과 민간의 상호간 인식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유경제에 관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추진
  - 아울러 공유경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단위인 시군 단위의 공공과 민간 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 공유경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해가기 위해 다음의 방향을 고려함
  - 방향 1 :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방향 2 : 계층별 맞춤형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시
  - 방향 3 : 교육·훈련 관련 기관을 연계·활용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세부 추진방안

● i) 현장 체험에 기반하여 실무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 강화

- 공유경제 성공사례나 실패사례 등 다양한 사례의 발굴분석과 이에 기초한 체험기반 교육자료의 제작·활용
- 민간 주체의 참여가 촉진·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 대상 실무교육 과정을 개설·운영

● ii) 계층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과정(고급과정):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해외사례 학습과 현장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례중심의 문제해결 지향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모색
- 하급공무원 과정(중급과정): 공유경제 관련 민간 주체와 대면하고 있는 하급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적 교육프로그램 실시
  - 국내외 거버넌스 우수사례를 탐방하고, 공유경제 주체와의 토론과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공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통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
- 시민대상 과정(초급과정): 시민(시민활동가)을 대상으로 공유경제의 개념 및 용어, 공유경제 운영 방식과 행정지원체계 등을 교육

**<공유경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서울시는 공유경제 시작학교, 해외전문가 강연, 찾아가는 공유마당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공유경제 시작학교 운영 : 예비 공유창업가 또는 공유활동가 대상 공유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유경제 해외전문가 강연 : 세러블 창업자 닐 고렌플로 강연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
  - 찾아가는 공유마당 운영 : 노원, 마포, 서초, 영등포 등 4개소 자치구 공무원, 마을공동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유강의, 사례소개, 공유기업 홍보 부스체험 등 운영

● iii) 교육훈련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 및 시설을 연계·활용한 네트워크형 공유경제 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 충청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은 물론, 공유경제 교육이 가능한 대학이나 민간연구소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 충남공무원교육원-대학교-전문 민간연구소로 연결되는 네트워크형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유경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5) 충남 공유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① 「충청남도 공유경제 촉진 기본조례」 제정

####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 공유경제가 도 전반에 정착되어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조례는 부재한 실정임
- 최근, 도정 차원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공유경제 촉진 기본조례」(가칭) 제정이 필요
  - 충청남도 차원의 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시군 차원에서도 공유경제 관련 조례 제정을 유도함

#### □ 「충청남도 공유경제 촉진 기본조례」(안) 주요 내용

- 「충청남도 공유경제 기본조례」는 공유경제 목적 및 기본원칙,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유기업(단체) 지정, 육성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다음과 같은 요소를 세부 내용으로 함
  - i) 공유경제 촉진 사업, ii)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iii) 충남도 공유경제 실태조사, iv)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지정·지원, v)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vi)기타 사항

#### <공유경제 조례 제정 사례>

-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였으며, 2013년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제정
  - 조례는 공유촉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
- 부산시는 2014년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
  - 조례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공유촉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



● i)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

-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며, 이를 중심으로 충남도의 공유경제 정책(사업) 기획·추진
-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은 5개 정책이 대표적이며, 이외 담당 부서, 시민 사회,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굴 필요
  -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사업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사업
  -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사업
  -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사업
  -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ii)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시행

-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에 주요 사항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음
- 공유경제 기본계획은 충남도 차원에서 5년마다 수립·시행
- 공유경제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공유경제 기본계획 구성요소(안)>

- i)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 ii)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 iii)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iv)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 v)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vi)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iii) 충남 공유경제 실태조사

- 충남 공유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공유경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

● iv) 충남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 지정

-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하도록 함



◎ v)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 공유경제 정책 기획 및 심의를 위해 ‘충청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설치
- 동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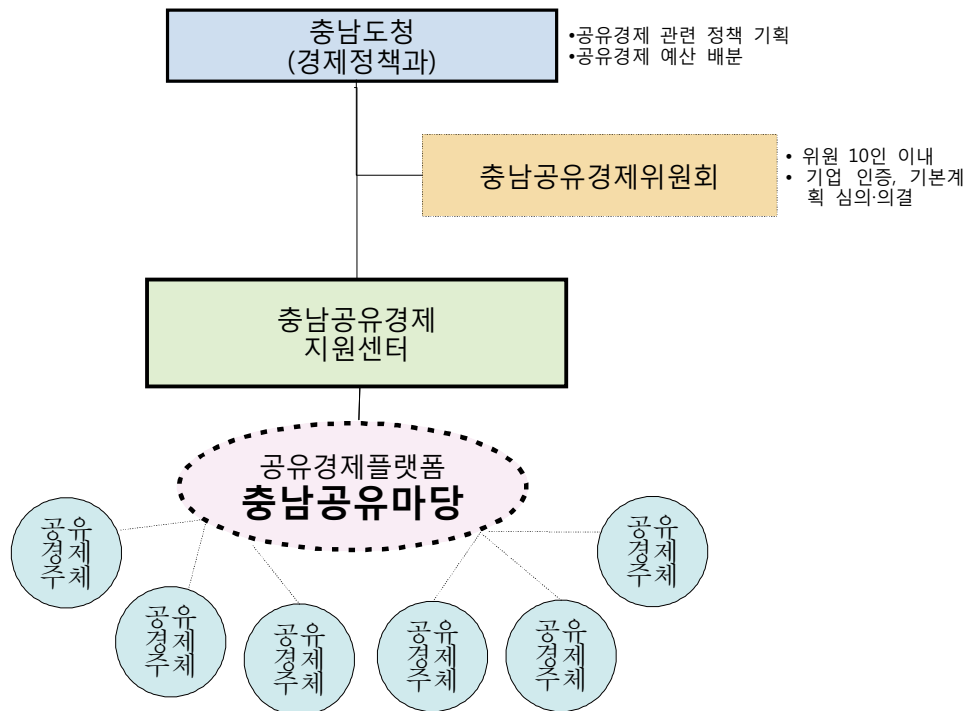
<표 17> 「충남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의 주요내용

주요 조항	내용
제1조(목적)	·공유경제의 의의 및 육성 목적
제2조(정의)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범위 등
제3조(책무)	·충남도의 역할, 시군 및 지방공기업의 역할 등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타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 수립 방법, 수립 주체 등
제6조(실태조사)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 등
제7조(공유경제 촉진사업)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
제8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 관련
제9조(보조금 등 지원)	·보조금 지원 사항
제10조(충남공유경제위원회)	·공유경제 관련 기획·심의 관련 위원회 설치
제11조(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제12조(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운영)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플랫폼 설치·운영
제13조(지원센터 설치 등)	·공유경제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② 충남 공유경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 □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충남 공유경제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조정에서부터 중간지원까지 이르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
- 이러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의 방향을 고려함
  - 방향 1 : 공유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 방향 2 : 충남 공유경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체계 구축



<그림 3> 충남 공유경제 정책 추진체계

### □ 세부 추진방안

- i) 공유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충남공유경제위원회’ 설치·운영
  - 조직 형태 : 충남공유경제위원회는 개방형 조직인 “상설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 위원 구성 : 위원회는 도청, 도의회, 전문가,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 대표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주요 역할 : 위원회는 ‘충남 공유경제 육성계획(5개년)’의 최종심의의결과 더불어 공유경제 사업실행 관련 중대 사안에 대한 의결조정 등의 역할 수행
- 단,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충남사회적경제정책기획위원회에서 대행도 검토

#### <공유경제 관련 위원회 운영 사례>

- 대전 공유활성화위원회
  - 구성 : 당연직 위원은 과학경제국장, 도시재생본부장이 되며, 의회 추천,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역할 : 공유활성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공유활성화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 공유단체 및 공유네트워크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
- 경기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 구성 : 동 위원회는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
  - 역할 :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

#### ◎ ii) 공유경제 중간지원체계로서 ‘충남공유경제지원센터’설치·운영

- 운영 방식 : 동 센터는 공유경제 관련 대표 기관이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하며, 관련 주체가 부재할 경우 유사 영역인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 주요 기능 : 센터는 정책제안 및 사업 기획,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 인증 사업, 기타 공모사업, 교육 및 홍보, 상담 컨설팅 등 제반 지원사업을 수행
- 단,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센터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 고려

<표 18> 충남공유경제지원센터 주요 역할

구분	주요 내용
정책제안	·공유경제 정책(사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조사연구	·충남 공유경제 현황 및 실태 조사
공유경제단체 및 기업 인증	·충남형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 인증제 운영
공모사업 운영	·재정지원사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교육 및 홍보	·공유경제 관련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운영
상담 및 컨설팅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컨설팅 운영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누구나가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 개최(행사, 포럼, 심포지엄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허브 역할 수행

## ◆ 참고자료 ◆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2013). “공유경제 현상을 통해 본 사회적 파급효과”, 「투게the」 2013년 5월호, Vol.9.
- 기획재정부·KDI. (2015). “공유경제의 이슈와 해법”, 2015년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
- 김은란 외, (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점산 외, (2014).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이슈&진단」, 경기개발연구원.
- 김형균. (2014). “공유경제와 도시재생”, 제4차 지역정책포럼 발표자료.
- 박봉원, (2013). “무소유, 공유경제 그리고 강원도”, 「정책메모」, 강원발전연구원.
- 손상영, (2015). “공유경제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정책적 대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오재학·박준식. (2011). “공유기반 교통시스템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 유영심·박봉원, (2014). “강원도 여행서비스의 공유경제활용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전지훈강현철, (2015).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기반의 탐색적 연구: 공동체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9(1)
- 제러미 리프킨 저. 인진환 역. (2014). 「한계비용 제로 사회(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 민음사.
- 클라우드산업연구소·위즈덤. (2013).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기업들을 통해 살펴본 공유경제」.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 기념 연구보고서.
- KOSEN. (2015). “글로벌 공유경제 산업현황과 주요 사업자의 시장가치 분석”, 「KOSEN 동향보고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황영모 외, (2015). “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Agyeman, Julian., McLaren, Duncan., & Schaefer-Borrego, Adrienne. (2013). 「Sharing Cities」. Friends of the Earth-See things differently.
- Algar, Ray. (2007). Collaborative Consumption Leisure Report. (<http://www.oxygen-consulting.co.uk>)
- Botsman, Rachel, Rogers, Roo. (2010). Beyond Zipcar: Collaborative Consumption. Harvard Business Review, 88(10).
- Dubie Woskow. (2014). 「Unlocking the sharing economy An independent reviews」.
- Gov.UK. (2014). 「Press Release: Move to make UK global centre for sharing economy, 29 September 2014s」.
- Walljasper, Jay. (2010). All That We Share: A Field Guide to the Commons. NY: The New Press.